

## 英國의 電氣事業民營化 逆效果 招來

「英國의 전기사업 민영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 4월에 시작된英國의 전기사업 민영화를 이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전기사업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전, 송전, 배전 각 부문별로 분할 민영화한 것은 경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협력관계의 상실로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등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민영화도 전기사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못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英國 전기사업 민영화 2년후의 성과」라는 표제하에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위촉을 받아 프랑스 파리의 컨설팅회사인 Technologia社가 작성한 것으로 지난 2월말에 발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발전, 송전, 배전 각 부문을 독립시킴으로써 수용가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오고 각종 민간자본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각 부문간의 협력관계를 손

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안이하게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은 못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 「88년 1월부터 92년 1월까지 사이에英國의 전기요금은 약 40% 인상됐는데 이것은 일반물가지수를 8포인트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발전분야의 고용인원도 40% 감소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자사에서 작년 여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영국민의 47%가 전기사업의 민영화를 「부적당하다」고 응답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약 3분의 1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의뢰한 프랑스전력공사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월말로 예정돼 있는 프랑스의 회 총선에서는 사회당이 패배하고 중도보수파가 압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10년간 계속된 사회당정권하에서 잠잠했던 프랑스전력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중도보수파정권 탄생으로 재연될 것이 예상

된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전기사업체의 독점체제를 분할한다는 것은 수용가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대처 보수당 정권하에서 강행된英國의 전기사업 민영화를 예로 들어 프랑스전력공사의 민영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

英國에서는 국가기관인 중앙전력청(CEGB)이 발전, 송전, 배전 각 부문별로 분할 민영화돼 National Power社(발전부문), National Grid社(송전부문) 등이 설립됐다.

英國 하원 에너지위원회는 작년 봄 전기사업 민영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냈는데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는 등英國내에서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日本の 海外電力調査會에서도英國의 전기사업 민영화 현황에 언급하면서 경쟁체제의 골격은 만들어졌지만 1. 1,000kW 이상의 수용가 밖에는 공급업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2. 일정 비율의英國석탄공사 석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원자력稅를 징수해 원자력을 보조하고 있다는 등의 많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호조치가 완전히 철폐되는 98년까지는 경쟁원리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日本 電氣新聞 3月 11日)■